

1970년대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

박현미**

초 록

본 연구는 1970년대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사업장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심각했던 성별임금 격차는 전혀 해소하지 못한 반면에 모성보호제도는 상대적으로 개선시켜낸 현실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1960~70년대 남녀임금차별 문제와 모성보호 문제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의식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노총과 여성노동자들이 기존의 성별분업 규범을 전제로 한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성별화된 지도계몽활동의 성격을 띤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의 보수적인 여성 정체성을 강화시켜왔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노동조합의 가족계획 관련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참여가 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1970년대 여성들이 높은 노조조직률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조에서 차별임금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아가 노동조합에서 모자보건, 2세 국민출산 및 양육자 등을 명분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시켜 왔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핵심 자료는 한국노총의 사업보고서와 가족계획판 신문, 노동조합과 노동청 등의 가족계획사업 발간 자료 등이다.

주제어 : 노동조합,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성별 임금격차, 모성보호,
여성노동자, 전통적인 성역할규범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발전국가시대의 성별화된 노동조합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 연구: 1960~70년대 한국노총 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꼼꼼하고 성의있는 논평으로 이 논문의 완성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세 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mymagpie@naver.com)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논문은 1970년대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사업장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심각했던 성별임금 격차는 전혀 해소하지 못한 반면에 모성보호조치들은 상대적으로 진전시켜낸 현실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1970년대는 한국에서 여성의 노조조직률이나 유일한 상급단체였던 한국노총 내 여성비율이 유례없이 높았다¹⁾. 하지만 당시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나 여성노동운동은 명백하게 성차별적인 노동조합정책이나 성별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반대 혹은 저항,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1970년대 조합원의 80% 이상이 여성노동자들이었던 ‘민주노조’ 사업장 대부분에서도 성차별적 임금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²⁾. 오히려 여성의 노조조직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악화되기도 했다³⁾. 선행연구들이 노조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 효과를 주장하고 남녀 간 임금차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여성의 노조가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실은 설명이 필요하다. 왜 여성의 노조조직률이 유례없이 높았고 노조 내 남성 대비 여성비율이 평균 30%⁴⁾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

반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에서 모성보호 문제는 핵심적인 여성노동문제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개선을 시도했

1) 2018년 현재 여성의 노조조직률은 5.9%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반면 1978년 여성의 노조조직률은 21.2%였다(한국노동연구원, 1990:152).

2) 1970년대 대표적 민주노조인 원풍모방 노동조합의 1981년 임금인상 요구액에서 남녀차별이 있고 타결액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박현미, 2019: 191). 유경순(2017:97)에 따르면,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젠더문제(성별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성차별적이었다.

3) 여성의 노조조직률은 1975년 19.3%로 1973년 13.6%에 비해 5.7%포인트 높아졌지만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1973년 45.5%에서 1975년 42.2%로 3.2%포인트 떨어졌다(박현미, 2020:26).

4) 노동조합도 여성할당제는 30%를 보통 요구한다. 30-35%는 어떤 조직에서 소수집단이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 비율로 간주된다(United Nations(1992.12), E/CN.6/1992/7, No.38, 김선옥·김명숙, 1994에서 재인용).

다. 특히 생리휴가 문제는 1960년대 초부터 다수 산별노조의 여성활동이 중점을 둔 사안이었다. 그 결과 한국노총 조직들⁵⁾의 여성 노동조건 향상 활동은 단체협약에서 관련 조항의 확보, 사용률 증가 등으로 모성보호 조치 개선에 기여하였다⁶⁾. 당시 한국노총의 산별조직들과 여성노동자들은 성별 임금격차와 모성보호의 문제에 상이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당시 노동조합의 공식문건을 보면, 1960~70년대 노동조합의 임금차별 관행이나 교섭활동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여성조합원들의 문제의식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임금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식이 실제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남녀 임금차별 인상 요구는 공공연하게 19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노동조합 내의 성별 임금격차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생산되었다⁷⁾.

본 연구에서는 1960~70년대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와 모성보호 문제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의식과 대응이 위와 같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총과 여성노동자들이 전통적인 성별 규범을 전제로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두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분석할 것이다. 1970년대 국가시책에의 협조 차원에서 수행된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은 한편으로는 성별화된 지도계몽활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성장제일주의 기치 아래 성별화된 산업화 전략을 구사했던 박정희 정권은 국가주도 근대화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다. 1970년대에는 노동조합이 사업장 가족계획정책 집행 기제의 하나로 동원되었다. 대공장의 미혼 여성노동자를 핵심 대상으로 했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은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 주도의 성별화된 대표적 지도계몽활동으로서 여성노동자들에게 공사영역을 구분하는 성별분업 의식을 내면화시키고 보수적인 여성 정체성을 강화시켰다.

5) 여기에는 대표적 '민주노조'로 지칭되었던 노조들도 포함된다. 당시 한국노총 산별조직 집행부 등과 갈등 혹은 긴장관계에 있었던 노조들이 일부 있었지만 이들 모두 유일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었다. 이들 노조가 실제 해당 산별조직에서 다른 노조들과 활동했던 기록은 각 산별노조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된다.

6) 한국노총의 모성보호 활동은 근로기준법의 여성특별보호조항에 근거해 노동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육아시간 확보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박현미(2019:205-232) 참조.

7) 관련 내용은 박현미(2020) 참조.

“국가재건의 토대는 건전한 가정”(보건사회부, 1987:97)임을 내세웠던 당시 국가개발에 기여하는 여성의 육성, 건전가정⁸⁾의 육성은 개발국가의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황정미, 2001:181). 당시 ‘가족계획’이라는 담론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고 출산하여 부모가 될 것을 계획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감으로써 가정에 묶이지 않으려는 여성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여성을 일차적으로 아내이자 어머니로 간주하는 통념을 더욱 강화하였다(배은경, 2004:214). 그러나 당시 여성들의 이상적인 모습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내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적당한 수의 아이를 낳아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길러내는 근대적 어머니의 모습, 가정생활의 관리자를 강조했다(신현옥, 2000:58, 95)⁹⁾. 1970년대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가 당연시되었던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고용은 물론 특히 임금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노동시장 문제는 노동조합 의제로 제기될 수 없었고 공론화시킬 수도 없었다. 1970년대 한국에서 심각했던 성별 임금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유지, 재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은 당시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의 내용과 여성들의 참여를 살펴보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성별 임금격차와 모성보호 문제에 대한 의식과 대응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를 찾아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분석시각을 서술하고 연구방법 및 자료를 소개할 것이다. 둘째, 한국노총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배경과 과정, 내용 그리고 여성간부의 역할을 알아본다. 셋째, 한국노총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내용과 관련해 여성조합원 교육과 가족계획신문 발행사업을 소개할 것이다. 넷째,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조건에 미친 이중적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 등을 서술할 것이다.

8) 남성가장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로서의 여성과 아들로 구성되는 전통적 남성중심적 가족 형태를 의미한다(황정미, 2001:182).

9) 한국노총은 1975년 가족계획사업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참여의욕을 높이기 위해 계몽표어를 공개 모집하였다. 당선작 중에 “자식 많은 자랑 말고 바로 길러 자랑하자”(광산노조 이효진)가 있다(한국노총, 1977:57).

2. 기존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시각

1) 기존연구 검토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 가족계획사업은 여성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 많이 연구되어왔다(이명선, 1990; 장필화, 1990:6; 황정미, 2001:7; 신현옥, 2000).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 관련 연구는 국가정책이나 인구학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국가동원에 의한 인구억제 및 경제성장 수단으로서의 가족계획과 그 성공, 인구성장 억제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 분석이나 가족계획사업의 실태 및 정책의 집행, 결과, 출산조절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이명선, 1990:116; 김홍주, 2002:53; 김명숙, 2004:116). 그러나 1970년대 이후 80년대에 한국에 여성학과 진보적인 여성운동이 도입되면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 혹은 반여성적 성격에 주목하였다(이미경, 1989; 이명선, 1990; 김은실, 1991; 배은경, 2004)¹⁰⁾.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의 삶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한 연구들은 우선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의 이해관계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한 근대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시행됨으로써 나타난 관련 정책의 반여성적인 성격을 비판한다. 예컨대 비자율적인 피임 결정에서 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으며(이미경, 1989), 여성은 정책대상 집단으로 혹은 일선의 정책전달자로 역할을 했을 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이명선, 1990:131)는 것이다. 배은경(2004)은 가족계획사업이 출산조절 당사자의 자율성은커녕 신체적 안전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출산억제만을 목표로 시행되었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출산조절이 여성의 삶에 대한 기회와 선택권에 기여한 바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배은경, 2004:214).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들과 관련된 위 논의들 외에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가족계획사업과 여성들의 성역할 의식 간의 관계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여러 연구에서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강화해왔음을 지적한다(김은실, 1999; 신현옥, 2000; 배은경, 2004; 김명숙, 2004).

가족계획사업은 성별화된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70년대에 국가의 핵심

10) 이들 연구는 가족계획사업의 부정적 측면만 논하지 않는다. 이명선(1990), 이미경(1989) 등은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에게 갖는 이중성을 지적한다.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김은실(1991)은 가족계획사업이 국가가 의도하는 근대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게 통합된 가족모델을 사회에 정착 시키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한다(김은실, 1991:154). 배은경(2004)도 가족계획사업은 여성의 생애를 ‘가족’ 속에 제한하는 전형적인 효과를 가졌다고 지적한다. ‘가족계획’이라는 담론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고 출산하여 부모가 될 것을 계획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감으로써 가정에 묶이지 않으려는 여성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여성을 일차적으로 아내이자 어머니로 간주하는 통념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이다(배은경, 2004:214). 1960-70년대 정부는 성별분업에 기초하여 가족을 단위로 한 발전전략, 즉 가부장적 발전동원체제를 구사하면서 여성을 일차적으로는 가정영역의 내부 존재로 인식하였다(신현옥, 2000). 이런 배경에서 볼 때 가족계획사업은 한편으로는 조국 근대화란 미명 아래 추진된 경제발전을 위한 인구성장 억제/통제정책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한 조국 근대화 사업에 적합한 가족 만들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0-70년대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서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의 인권회복이나 남녀평등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했던 수단형 정책으로서 문제가 많음이 지적되는 배경이다(장필화, 1990:6; 이명선, 1990).

2) 기존 연구 한계와 본 연구의 분석 시각

본 연구는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삶에 대한 기회와 선택권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제한적”(배은경, 2004:214), 혹은 “여성의 인권회복이나 남녀평등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했던”(장필화, 1990:6; 이명선, 1990) 문제를 지적했던 연구들과 같은 선상에서 1970년대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1961년 근대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1970년대 전국단위 상급단체로서 유일했던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공동사업으로 약 5년간 추진하였던 가족계획사업에 주목하지 않았다. 유엔인구기금(이하 UNFPA) 지원을 받아 1975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준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석된 바가 없다.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다루는 연구는 일부 있다. 이들 연구는 대개 사업의 배경이나 사업내용, 실태, 가족계획에 관한 태도나 의식 조사,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의 성과나 평가 등을 주로 다룬다. 예컨대 산업근로자의 가족계획에 관

한 태도 조사(맹광호, 이달영, 김순태, 1973), 산업장 가족계획 실태나 사업을 소개하는 연구(맹광호, 1975; 이상헌, 1982; 대한가족계획협회, 1980),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진행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를 조사한 연구(이양재, 1972), 산업장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산업보건관리요원의 태도조사(맹광호, 1977) 등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노조에서 전개한 가족계획사업 내용이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의 주 대상은 기혼일반여성이었지만 노동조합 가족계획사업의 주요 대상은 미혼여성들이었다. 사업대상이 다른 만큼 사업내용에서도 차이가 예상된다. 예컨대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피임기구 제공, 피임 방법이나 지식 제공, 실천 등에서부터 출산조절 욕구, 모자보건 개선 및 양육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계몽하면서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가임기의 미혼 여성층은 가족계획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자 실천이 가능한 층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계획사업은 성교육, 계몽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요컨대 기혼여성들과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목적이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미혼여성을 사업 대상으로 했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은 주목받지 않았고 관련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은 1970년대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집행기관으로서 한국노총이 사업장에서 전개한 가족계획사업을 지도계몽활동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의 의식에 미친 양면성을 확인할 것이다. 예컨대 노동조합 가족계획사업이 한편으로는 노동현장에 전통적인 성역할 담론을 확산시키면서 여성노동자의 보수적인 여성정체성을 강화시켰지만 가족계획사업 차원에서 전개한 노동조합의 교육이나 계몽활동에 여성노동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모성보호 등 권리의식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핵심적인 자료는 한국노총 사업보고서와 한국노총 가족계획관 신문이다. 사업보고서는 노동조합에서 매년 발간하는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활동보고서이다. 가족계획사업 내용은 1973년부터 1981년까지 '부녀활동' 부분에서 소개되었다. 한국노총 가족계획관 신문은 1978년 12월 30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981년 9월까지 매월 2면씩 한국노총 기관지

의 간지 형태로 발간되었다. 이외 「한국노총 가족계획사업요원 훈련교재」, 「‘한국노총’지 독자여론조사보고서(1978.10.)」,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독자여론조사 보고서(1979.6.)」등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1960~70년대 한국노총 여성부서에 근무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제 집행했던 한국노총 여성 간부 3명과 1970년대 화학노조 S제약 지부장을 역임한 여성간부 1명의 면접내용도 활용하였다.

II. 한국노총의 가족계획사업과 여성간부 역할

1. 사업장 가족계획 추진 배경

가족계획사업은 1960~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 경제개발과 함께 시작되고 지속된 핵심국가정책의 하나인데 한국노총에서 가족계획사업은 1975년에 본격화되었다. 이에 앞선 1973년 한국노총은 가족계획사업을 한국노총의 정규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당시 한국노총은 과거 임금인상 위주의 운동방향을 재평가하면서 노동복지, 물가안정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등과 같은 실리를 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가족계획사업도 채택하였다(한국노총, 1973R¹¹⁾: 157). 이는 한국노총이 인구문제와 노동자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 문제를 결부시킨 것이다. 한국노총은 인구증가가 불완전 실업자를 증대시켜 치열한 취업경쟁을 야기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부양가족수를 증가시켜 가정생활의 압박을 가져오게 된다고 인식하였다¹²⁾. 한국노총은 이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재정 후원으로 1973년에 3회에 걸쳐 인구문제와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한국노총, 1973R: 50).

여성간부 D는 한국노총 복지부녀국장으로서 한국노총에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하였는데(한국노총, 1977: 96) 한국노총이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하나로 빈번했던 산재사고를 들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산재사고

11) 1973R은 한국노총 1973년 사업보고이다. 이하 한국노총 각 년도 사업보고는 연도 뒤에 R로 표기하고 인용한 페이지를 명기하였다.

12) 조합원들도 이같은 인식을 동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5년 한국노총이 가족계획사업 계몽표어를 공개 모집한 결과 당선작 5개 중에 “없는 살림 한탄 말고 먼저 할 일 가족계획”(철도노조 안성효), “한발 앞선 가족계획 생활안정 앞당긴다”(자동차노조 김경희)는 표어가 포함되었다(한국노총, 1977:57).

가 많이 났는데, 그 원인을 보니 가족관계가 영향을 많이 주었다. 아이들은 많고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 잠도 제대로 못자니까 피곤해서 졸다가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생겼다. 이에 당시 산재사고는 인구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사업장에서도 가족계획을 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필요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여성간부 D 구술, 2018.3.9.)¹³⁾.

1975년 한국노총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가족계획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이 되었다. ‘근로가족 복지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국노총이 진행한 이 사업은 노사정이 UNFPA 지원을 받아 1975~1977년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¹⁴⁾. 한국노총이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게 된 것은 국가 차원에서 1960년대 출산율이 높았던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업을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정부시책이었던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적이라 평가되었다(맹광호, 1972: 14; 맹광호·김순태·이달영, 1973: 3; 장경식, 1972: 114).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출산층 여성의 절대수 증가, 가족계획 실천율 저조, 그리고 남아선호 외에 모자보건사업의 난점 등으로 향후 정부의 인구증가율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지적되었다(이양재, 1972: 57; 장경식, 1972: 116-118). 이에 가족계획사업의 대상 설정이나 추진방식 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잇달았다(맹광호·김순태·이달영, 1973: 3; 이양재, 1972: 57; 홍승직, 1980: 34). 특히 1960년대는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도시화가 진전되었고 사업장 수와 함께 노동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은 연령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의 주요 대상이었다(노동청, 1977).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되었고 그 추진은 중요하며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노동청, 1977; 맹광호·김순태·이달영, 1973: 3). 특히 가족계획실천 대상으로서 사업장은 매우 중요하며 조직화된 집단이고 연령구조상 젊은 층이라는 점에서 가족계획사업의 수행에 강점이 있었다(이양재, 1972; 맹광호, 1972, 맹광호·김순태·이달영, 1973: 3에서 재인용; 박래영, 1972; ILO, 1972; ILO/ECAFE, 1972). 맹광호(1972)는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의 모범 사례로 인도의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노동조

13) 산재사고의 원인이 다양한데 그 원인을 노동자 개인에게 두는 듯한 이러한 언급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당시 빈번했던 산업재해가 노동조합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언급되었음을 확인한다.

14) 이 사업은 정부와 노사공동으로 추진되며 그 예산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정부 보조로 이루어진 총 19만8천불로 그중 한국노총은 8만5천5백불로 각종 사업을 벌이게 된다(한국노총 기관지, 1975.1.20.).

합 역할이 어느 단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한국노총의 가족계획사업 추진과정

한국노총의 가족계획사업은 근로가족 복지사업이란 명칭 아래 1975년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1972년 ILO 후원으로 '인구정책과 가족계획'을 주제로 가족계획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한국노총과 산별조직에서 추천된 남녀간부 38명이 참가하였다. 당시 한 강좌에서는 자녀의 양육목표를 제안하면서 “신랑-경제, 신부-가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강좌는 제1차 목표로 “우리의 자신과 자녀를 하나의 인간 즉 남성은 남자로, 여성은 여자로 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한국노총, 1972: 90).

1975년 1월부터 노동청 주관하에 한국노총은 한국경영자협회와 공동으로 근로가족 복지사업을 시작하였다. 첫 사업으로 한국노총은 교육 전담요원 훈련을 28개월간 진행하였다. 17개 산별노조에서 1700명의 사업요원을 양성하고 그들이 산별노조에서 1인당 최소한 7명 정도의 자발적 참여자를 계몽토록 하는 요원훈련이었다. 전국순회교육으로서 대상은 전달교육과 계몽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원조합 남녀 중견간부들이다(한국노총, 1975R: 244). 교육 내용은 미혼여성을 위한 성교육을 비롯해 훈련 이수자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통찰하고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임금을 향상시키고 대인접촉을 통하여 복지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교육 후 계몽활동 전개를 위하여 “대인접근요령,” “집단지도방법”을 배치했고, 물 플레이, 계몽 포스터 그리기 외에 분임토의 등의 교육방법도 시도하였다(한국노총, 1975R: 244-245; 한국노총, 1977R: 31). 이러한 요원양성 교육은 총 23회에 걸쳐 1,35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별노조 298명, 시·도협의회 543명, 지구협의회 516명의 간부 등이 참석했다(한국노총, 1977: 42-43).

당시 산별노조들은 가족계획사업 차원에서 진행된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다. 1975년에 전매노조의 청주 제조창 지부교육은 수강 희망자가 많아 연 2회의 차출과정을 통해 능력 있고 전달교육을 잘할 수 있는 수강생을 선발하였다. 수강생 대부분이 중년 부녀자로서 인구가 가정경제 및 국가의 경제발전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크게 가졌다. 피임방법도 상세히 답습하였는데, 훈련이수자들은 사업요원으로서 조합원과 이웃사람들에게 가족계획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경기도협의회 교육에서는 경인지역의 남녀 중견간부들이 참여하였는데, 부두노조(28명), 운수노조(9명), 섬유노조(7

명), 금속노조(5명)의 간부들이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각종 교육에 가족계획시간을 할애하여 계몽활동을 하였다(한국노총, 1977: 25). 1976년의 경우 크고 작은 면방, 잠사 등 섬유업종이 많은 천안지역의 지구협의회 교육에는 미혼층 여성들이 절반 이상 참여했다. 분회장급 이상의 남자간부들은 교육 후에도 사업장에 돌아가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사내 게시판에 이용하는 등 홍보사업에 관심이 더 컸다(한국노총, 1977: 25). 경상북도협의회 교육에서는 지부장급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조합간부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 돌아가 각종 교육에 가족계획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기간 중 분임토의에서는 자동차, 섬유, 관광 분야 여성조합원들이 당면문제와 해결책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근로 여성지도와 가족계획문제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라북도협의회 교육에서는 전매노조를 비롯한 여성조합원들이 계몽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점촌지구협의회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한국노총, 1977: 31-42). 이처럼 훈련된 요원은 각기 소속 사업장에 돌아가 일선 조합원을 계몽하고 피임을 권장하며 시술 희망자를 병원으로 인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한국노총, 1977: 25).

계몽활동은 조합원 대다수가 미혼 근로여성인 섬유노조에서 어느 산별보다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외부강사 초빙, 노동교육 중 가족계획시간의 필수화, 사업장 홍보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75~76년까지 섬유조합원 5,841명이 교육을 받았다. 체신노조나 전매노조에서도 많은 조합원들이 계몽활동에 참여하였다. 숫적으로는 적지만 남자조합원도 교육을 받았다¹⁵⁾.

3. 가족계획사업 추진과 여성간부 역할

1975년 한국노총은 부녀부에 특별실을 설치하고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노총이 1975년 가족계획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시작한 첫 사업은 한국노총 교육전담요원 훈련이었다. 그해 2월에 실시한 이 교육은 17개 산별노조 대표자(부녀부장)들을 대상으로 한 첫 훈련인 동시에 향후 노동조합에서 훈련을 전담할 교관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이었다. 이들에게는 향후 17개 산별노조에서 차출되는 사업장 내 요원 1,700명을 위해 교육을 전담하고 지도, 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노동청, 1975: 9).

15) 구체적인 현황은 한국노총, 1977: 126-157 참조.

당시 가족계획사업을 지도, 계몽했던 전담 지도요원들은 1972년에 첫 교육을 받았던 여성간부들로서 소속은 한국노총 본부를 비롯해 전매, 철도, 체신, 금속, 섬유, 출판, 외기, 해원 등 8개 조직이다. 한국노총은 1972년 ILO 후원으로 '인구정책과 가족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때 남녀간부 38명이 참가하였다. 이들 중 부녀업무와 관련된 간부가 22명(부녀부/차장, 부녀위원)으로 57.9%에 달한다(한국노총, 1972: 28). 이날 수강생들은 노조에 대한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강생들은 결의안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땅히 인구정책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보다 잘 살아보자는 10월 유신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노동조합도 정부와 민간전문기구와 발맞추어 범국민운동으로 가족계획사업을 벌여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힘써야겠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가족계획사업은 조합활동의 하나로 채택, 노동자의 장기 복지향상 운동과 직결시킬 필요가 있음을 재강조한다”고 천명했다(한국노총, 1973R: 51-52).

이들 여성간부들은 사업요원 가족계획, 가족계획 상담요령, 대인접근과 계몽방법 외에 각종 교양교육, 집단지도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과 계몽활동을 했다. 예컨대 체신노조 간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외전화국 조합원교육에 가족계획시간을 할애하여 '인구문제와 경제발전'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종 교양강좌시간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철도에서는 부녀간부 교육과 안보교육 기간 중에 가족계획시간을 할애하여 계몽영화를 상영하였다.

가족계획 사업요원들의 계몽활동은 동기 조성자 확보와 피임권장이다. 가족계획사업 요원훈련이 일반교육과 다른 점은 훈련 이수 후 반드시 소속 사업장에 돌아가 전달교육과 계몽사업을 전개해야 하고 피임수술 희망자를 병원에 연결시켜 주는 일이다. 가족계획 사업요원 중에는 계몽실적이나 행정능력이 탁월하여 계속해서 사업장의 가족계획 홍보사업을 전개한 사람도 있었고 단체협약 체결 시 가족계획 시술 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데 앞장 선 사람도 있었다. 요원들이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실천할 때 함께 한 공동협력자(동기 조성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동기 조성자 확보는 개인 접촉을 통하여 상담 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확정된 것이다(한국노총, 1977:104).

〈표 1〉 가족계획 사업요원 훈련현황 및 계몽실적(연도별)

(단위: 명, %, 건)

기간	훈련이수자 (사업요원수)		상담기록 등록자		권장피임건수		동기조성자	
1975.4.~12.	668	49.2	3735	47.1	4105	42.1	6818	45.6
1976.1.~12.	589	43.4	3362	42.4	4302	44.1	6464	43.3
1977.1.~2.	100	7.4	830	10.5	1351	13.8	1660	11.1
전체	1357	100.0	7927	100.0	9758	100.0	14942	100.0

자료: 한국노총(1977:104~110 표13)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Ⅲ. 한국노총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분석

1. 여성조합원 교육

1975년 한국노총에서 본격화된 사업장 가족계획사업과 관련, 여성조합원의 교육내용은 혼전지도, 순결교육, 그리고 성교육 등이었다. 성교육이 별도로 없었고 말조차도 꺼내기 힘들었던 당시 성교육 등은 여성조합원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았다. ‘미혼 근로여성들을 위한 가족계획과 성교육’에 관한 한일합섬 수원공장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당시 여성조합원들이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성교육에 임했는지 당시 대한가족계획협회 경기도지부 전임강사의 글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는 1978년 1월부터 기숙사 내 교양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두 시간씩 진행됐던 교양강좌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¹⁶⁾(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4.30.).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이 토요일 강좌에 사생들이 극성스럽게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을 눈앞에 둔 사생들은 혼전의 성교육이나 순결에 대해 지나칠 만큼 깊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사랑과 성에 대한 강의는 그들이 확고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생관을 갖게 했고 결혼 때까지는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행복한 결혼을 하겠다는 사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

16) 당시 교육내용은 한국인의 남아선호사상, 미혼모 문제, 건전한 이성교제, 혼전 성교육, 배우자 선택의 지혜, 순결은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근로여성의 인생론, 행복론, 성과 정신위생, 행복한 가정의 구상, 사랑받는 아내의 길, 영양 등이다(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4.30.).

당시 한국노총의 가족계획 관련 교육은 여성간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실시하였다. S제약 지부장을 역임한 여성간부 C는 가족계획과 성교육이 많았다면서 화학노조의 여성부장이 가족계획 관련 교육을 하러 다녔다고 기억하고 있다(여성간부 C 구술, 2017.4.25.). 여성간부 A는 성교육 강사로 전국에 출장을 다녔고 근무시간에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한다. 당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교육을 시켰다(여성간부 A 구술, 2016. 8.30.). 그러나 여성간부 B는 남자들은 성교육에 오라 하면 “잘 안오고 또 웃고… 창피스럽게 거기 가서 뭐를 하나”는 반응도 있었지만, “남자, 여자를 다 한꺼번에 놓고” 강의한 적도 있었다고 전한다(여성간부 B 구술, 2017.11.13.).

여성간부 D는 여성조합원에게 가족계획사업 교육을 할 때 ‘잘 사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며 먹고 사는 것에 비교해 설명했다. 여성간부 D에 따르면, 여자들은 가족계획사업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남편의 수입한계 내에서 잘 사는 길에 대해 열 사람보다 다섯 사람이 살면 비용이 준다, 엔겔계수가 준다, 신문 하나는 볼 수 있다, 의복을 어떻게 입을 수 있다는 등 생활과 관련시켜 이야기하였다. 학력 수준이 낮아 먹고 사는 것에 비교해야 빨리 알아들었고 그래서 생계비에 비교해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여성간부 D 구술, 2018.3.9.). 여성간부 D는 당시 남자들은 “자기가 벌어 먹어야 하니까” 가족계획에 훨씬 더 협조를 잘 했다고도 전한다. 당시 광산 사업장을 많이 다녔는데, 산재도 많고 일도 어려워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더 있었다고 하면서 광산노동자들이 협조를 잘 해주었다고 기억한다.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벌어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이러한 경제적 접근은 남성들에게도 일정하게 효과가 있었다¹⁷⁾.

한국노총에서 1976년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 교육은 1,597명이 참여하였다. 한국노총은 사업장 내 가족계획사업의 집단계몽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1,700명의 요원양성교육을 일부 변경하여 1,400명만 훈련하고 3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1,500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웠다. 실제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좋고 수요가 많아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97명이 교육을 더 받았다. 교육대상은 대단위 사업장의 가임여성 특히 미혼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 교육의 취지는 1) 여성노동자에게 가족계획에 관한 제반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2) 미혼 근로여성에게 올바른 가족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3) 혼전지도에 만전을 기하며 4)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비롯한 근로여성의

17) 광산노조는 지역순회교육 중 임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인구문제와 가족계획’ 교육을 포함시켰다. 광산노조에서 1976년 상반기 권장 피임건수는 798건, 1976년 하반기 권장피임건수는 1,826건이다(한국노총, 1977: 126-157).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었다. 교육은 한국노총 강당에서 1일 4시간씩 3일간 계속 되었는데 여성조합원들의 작업시간이 끝난 후 주야를 불문하고 진행되었다. 다만 섬유노조 방림방적 지부 교육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야간작업을 마친 여성조합원들이 다시 유니폼을 바꿔입고 노총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었다. 당초 노총은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예정했으나 방림방적 지부에서 50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부담하면서 30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여성조합원의 교육용 강의제목은 생식생리, 혼전지도, 인구문제와 식량자원 외에 피임법, 가족계획 홍보사업, 그리고 가족계획 필요성, 영화(노동자의 복지 안내) 등이다(한국노총, 1977: 46-47). 1976년 6월부터 1977년 3월까지 노총 근로가족복지사업의 여성조합원 교육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노총 근로가족복지사업 여성조합원 교육 현황

일시	훈련이수자(여성 조합원)
1976.6.21-23	콘트롤데이타(51명), 새한전자(62명), 민성전자(129명), 국제금속(10명), 정화금속(10명) 등 금속노조 영등포지역지부 산하 262명 참석
1976.9.1-3	섬유노조 방림방적 지부 300명 참석
1976.1.24-26	금속노조 웨어차일드지부, 전자사업장 등 281명 참석
1976.11.29-12.1	서울좌석버스(63명), 관광버스(7명), 서울동부좌석버스(67명), 서울버스(113명) 등 자동차노조 250명 참석
1977.3.16-18	한독산업(14명), 해태제과(15명), 모나미/대동화학/진일고무/한국파일롯트(각 10명씩), 왕자문구, 삼성제약 등 44개 화학노조 사업장에서 194명 참석
1977.3.24-26	원풍산업, 동광모방, 의류지부 등 3개 지부 등 섬유노조 121명, 자동차노조 111명, 시그네틱스지부 등 금속노조 55명, 화학노조 12명 등 306명 참석

자료: 한국노총, 1977:48-52 참조.

여성조합원들이 받았던 교육 중 ‘혼전지도’ 강의는 성교육이란 제목으로 많이 실시되었다. 「한국노총 가족계획사업 요원 훈련교재」에 수록된 ‘혼전지도’ 강의안은 ‘혼전지도의 의미, 결혼 개념, 좋은 배우자, 약혼기간 중의 마음가짐과 성문제’ 외에 ‘혼전성교의 위험성이나 이상적인 결혼연령, 순결의 의미, 가족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혼전지도 교육이 특별히 필요한 곳으로는 정상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혼전기 연령층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공장이나 사업장 등이 지목되었다(한국노총, 1975: 62).

가족계획사업이 본격화된 1976년에는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홍보사업이 행해졌는데, 체신, 금속, 섬유노조 등에서 계몽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상영된

계몽영화는 16mm 30분용으로 ① 탐스러운 열매를 ② 딸이 더 좋아 ③ 사람, 사람, 사람 ④ 생명의 신비와 현명한 선택 등이다. 외화로는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AAFLI)에서 대여해온 피임법과 총 천연색 필름으로 피임방법의 실제와 상담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영화는 10대 미혼 근로여성에게는 자극적이었지만 호평 속에 상영되었다(한국노총, 1977: 54-55).

한국노총은 30분용 슬라이드 “노동자의 복지안내”를 만들었는데, 인구문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임방법, 홍보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일반 조합원들에게 배부되었던 계몽유인물로는 한국노총이 제작한 팜플렛 “근로가족복지안내,” 대한가족협회가 대량으로 기증한 각종 피임방법 등이 있다. 가족계획 사업은 미혼남녀들을 위한 성교육에 치중하여 홍보책자나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시청각교육으로 근로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생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순결교육에도 치중하여 왔다(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8.12.30.). 1976년 이후 사업장 내 홍보사업으로 실시된 계몽영화 상영 및 유인물 배부 현황은 <표 3>과 같다. 금속, 체신, 화학, 섬유, 자동차, 전매, 출판 등 여성 다수 산별노조의 205개 사업장의 23,393명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이 진행되었다(한국노총, 1977: 55).

<표 3> 1976년 이후 사업장 내 계몽영화 상영 및 유인물 배부 현황

연도	월간 순회 사업장 수(참석자 숫자)
1976년 3~12월	금속노조 웨어차일드 외 13개(4,600명), 체신노조 동대문 전화국 외 18개(2,306명), 화학노조 풍한발효 외 18개(2,950명), 섬유노조 세진레이온 외 9개(1,530명), 섬유노조 반도상사 외 19개(2,750명), 자동차노조 경기도 지부 외 9개(830명), 금속노조 기아산업 외 13개(1,285명), 전매노조 서강대교육 외 13개(900명), 출판노조 국정교과서 외 9개(815명), 자동차노조 외 13개(927명)
1977년 1~4월	체신노조 외 12개(1,065명), 금속노조 기아산업 외 14개(1,135명), 섬유노조 남영나이론 외 16개(1,110명), 화학노조 한독산업 외 15개(1,190명)
전체	205개 사업장 (23,393명)

자료: 한국노총, 1977: 55-56 참조.

한국노총에서 가족계획 교육용으로 만든 슬라이드나 영화 등은 현장에서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저희 지부에서는 올봄에 ‘내일을 위한 설계,’ ‘딸이 더 좋아’라는 가족계획 슬라이드를 돌렸어요. 그후 조합원들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성교육에는 유명한 교수 강연보다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슬라이드 상영이 단연 효과가 크리라 생각해요.”(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 11. 30.) 등의 반응에서 추론할 수 있다.

금속노조의 교육사례를 보면 당시 배포된 시청각 교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

지 알 수 있다. 금속노조 여성간부는 한국노총에서 배포한 ‘행복의 길,’ ‘딸이 더 좋아,’ ‘지구는 만원이다’ 같은 성교육 필름을 사업장에 다니며 돌려주고 있다고 전한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11.30.). 금속노조 페어차일드 지부는 식당에서 전 조합원 3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신비,’ ‘현명한 선택’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을 담당했던 금속노조 부녀부장은 이러한 시청각 교육이 효과적이라 평가하였다. 부녀부장은 ‘생산직에 근무하느라 피곤해하는 조합원에게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면서 78년도 하반기의 가족계획사업은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노총 복지부녀국에 비치되어 있는 교육용 시청각 기재를 활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 2. 28.).

화학노조에서도 1979년 부녀부장 세미나 프로그램에 미혼여성을 위한 순결교육 과정을 편성하였다. 이때 한국노총 복지부녀국에 비치되어 있는 영화 ‘행복의 길’을 상영하였다. 이날 전국에서 참석한 60명의 부녀부장들은 올바른 윤리관과 도덕관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시청각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 조합원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였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4.30.).

2. 한국노총 가족계획신문 발행 사업

한국노총은 1975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범조직적으로 벌여왔는데, 이 사업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향상 내지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란 판단에서였다. 한국노총은 이 인구문제사업이 노동자들이 부양인구를 조절함으로써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올리며 나아가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실질임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가족계획사업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가족계획판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이 사업은 1978년 7월부터 1981년 9월까지 UNFPA가 후원하고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보조하였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4.30.).

가족계획신문 사업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식과 장래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신문은 매월 1회씩 한국노총 기관지의 간지 형태로 발행하였다. 매월 30일자로 월 3만 부씩 발간된 가족계획판 신문은 기존에 한국노총 기관지가 배부되는 산별, 지부, 그리고 시도 지역협의회에 1만5천 부를 배부하고 나머지 부수는 청소년 근로자가 많은 산별노조 즉 섬유, 화학, 금속,

자동차에 추가로 배부하였다. 특히 신문은 현장에 근무하는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호응을 얻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중에서 ‘청소년근로자에게 보내는 글’과 ‘삼매경,’ ‘여성근로자의 권리’의 칼럼란에서는 사회인사들 중에서 노동자에게 관심이 많은 필진을 참여시켜 신문의 교육적인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한국노총, 1980R: 266).

1978년 7월부터 준비해 1981년 9월까지 39개월 동안 발간된 한국노총 가족계획판은 청소년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고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산별노조에 더 많이 배포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족계획신문의 수요가 많았지만, 신문이 충분히 배포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성교육 정보는 가족계획신문이 유일해요. 그런데 신문의 부수가 너무 적어요. 우리 사업장에서는 신문이 오면 게시판에 붙여 모든 조합원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진로주조 여성간부).” “신문을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볼 수 있게 많이 보내주었으면 해요(금강전자 여성간부)” 등을 통해 확인된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 11. 30.). 1979년 가족계획판 여론조사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보급부수를 늘려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한국노총, 1979: 86).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신문은 이를 접한 여성조합원들의 의식이나 가치관 등에 적잖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된 ‘청소년에게 보내는 글’은 학계 등 전문가와 유명 인사들의 기고문이었다. 이중 여성조합원의 성별의식에 영향을 미쳤을 일부 기사들은 성교육 관련, 여성자질과 교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성교육 관련

1970년대에는 어린 연소 여성노동자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에 관한 정보는 접하기 어려웠다. 이에 사업장 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당시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기사 중에서는 임신 7개월인 16세 여공이 임신 사실을 몰랐던 사례를 소개하며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지도하는 일이 어른의 사명임을 말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5.30.). 한국노총 여성간부들이 참여한 한 좌담회에서는 “생리가 무엇인지, 월경주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조합원이 많다. 설사 임신을 했다 해도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 몰라 찢쩍대는 딱한 경우도 있었다”¹⁸⁾는 사례도 언급됐다. 이에 사업장 성교육의 필요성이

18)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11.30.자 4면 기사「좌담회:사업장 성교육 무엇이 문제인가」중 금강전자 노조 여성간부 발언이다. 이 좌담회는 1979년 11월 27일 여성노동자 성

신문에서 주장되었다(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6.30.).

한국노총 가족계획관 신문은 현장 노동자들의 성교육에 도움이 되었다. 고정기사로 실렸던 ‘10대 성교육’ 기사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거나 성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한국노총 가족계획관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11. 30.). 10대의 성교육 기사는 1979년 「한국노총 가족계획관 독자여론조사보고서」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23.0%, 남성 응답자의 21.2%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여성의 경우는 17.0%가 사랑과 이성교제 기사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¹⁹⁾. 이런 결과를 토대로 여론 조사보고서는 10대 성교육 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한국노총, 1979: 98).

그러나 성교육에서는 여성들에게 순결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다. 당시 성교육의 강의를 ‘혼전지도’에서는 순결의 의미나 혼전 성교의 위험성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순결을 상실할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남녀 공히 배우자 선택 시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순결을 소홀히 했을 때 사생아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된다(한국노총, 1975: 65)고 교육하였다. 순결의 의미와 혼전성교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데 혼전 성관계가 육체적인 임신이나 남자의 변심 등으로 여성에게 특히 부담임을 지적하였다.

남녀가 결혼 이전에 육체관계를 같이하면 남자도 하여금 결혼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고 약혼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지게 하여 그 결과 결혼을 주저하고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도 적지 않다. 육체적인 임신, 정신적으로는 남자의 변심, 이것이 혼전 성관계의 두 가지 위험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여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한국노총, 1975: 64).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 규범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강의되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규범 문제는 한국노총 가족계획관의 기고문 “청소년 근로자에게 보내는 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미혼여성이 택할 길”에서는 일시적인 욕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여성이 겪어야 할 문제, 특히 미혼모가 될 경우 사회에서 배척을 받는 등 힘들게 살아가야 함을 거론한다. 혼전에 여성은 인내와 이성으로 성욕을 억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9.30.). “행복을 창조하는 슬기를 갖자”는 글에서도

실태와 효과적인 성교육 방법 등을 찾기 위해 열렸다.

19) 전체 조사대상 2460명(남성 489명, 여성 1971명) 중 응답자는 1509명(남성 333명, 여성 1176명)이다. 본문에 제시된 수치는 무응답을 제외한 것이다. 선택 항목은 18개인데 이중 10대의 성교육, 사랑과 이성교제, 에티켓 선생에 높게 응답했다(한국노총, 1979: 88).

혼전임신 문제가 지적된다. 남성들이 성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면서도 여성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사고를 대부분 갖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당시 한일합섬 수원공장 기숙사 사감의 글(‘사랑의 교육과 여권운동’)은 당시 미혼 여성노동자들의 연애사나 결혼관 일부를 보여준다. 이 글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거나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들이 “앞날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라 칭하고 있다. 기고문 “가족계획의 참뜻”에서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거론하면서 남자가 남자로서의 구실과 역할을 외면하거나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양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81.3.30.).

2) 여성자질과 교양 관련

당시 연재되었던 ‘청소년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여성들의 자질이나 교양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번영하고 행복한 가정은 모성 건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 4. 30.) 아래 여성들이 무질서하고 방종해서는 안되며 평생교육의 자세로 임하라 조언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8.12.30.).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란 글에서는 결혼 후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발달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모유를 수유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을 경우 아이의 인성발달에 크게 문제가 생긴다는 ‘위협’에 있다. 결국 여성은 결혼 후 자녀양육을 위해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린 시기 인성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 하면서도 여성의 자녀양육만을 언급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80.7.30.). 기고문 “뜻있는 곳에 길이 있음”은 마산수출공단을 참관하며 본 여성노동자 이야기이다. 필자는 여성노동자들의 취업동기를 어려운 가정형편, 남자형제의 학비 마련, 부모 치료비나 생활비 보조, 결혼자금 마련 등으로 보면서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진학기회를 놓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혼자서라도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간지보다는 양서를 읽으라 권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80.10.30.).

당시 가족계획신문은 성교육 정보를 제공해준 공식매체였다. 이를 통한 가족계획 계몽사업은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이중적 성윤리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성에 대한 지식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노동조합의 신문발간 사업은 전통적인 성별규범의 내면화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IV.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이중적 결과

가족계획정책 혹은 사업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1970년대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이중적이라 분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 가족계획사업은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나 ‘생애노동의식’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반면 가족계획사업은 여성노동자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예컨대 1970년대 유교적인 성별분업론에 기반한 노동조합활동은 당시 심각했던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문제는 이 나라를 이어나갈 어머니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내포된 중요한 문제”(금속노조, 1978R:390)라는 인식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성과를 이루어냈다(박현미, 2019)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는 성장제일주의를 주창한 국가주도로 성별화된 산업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체제가 강고해지던 시기였다. 당시 근대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가의 부녀계몽운동은 전통적인 성역할 담론에 기반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보조노동력,’ ‘임시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제2세 출산자, 양육자, 미래의 모성으로도 호명되었다. 1970년대 노동조합의 부녀계몽활동이나 교육 등 일상활동도 전통적인 성역할분업 담론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한국노총이나 산별노조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문제를 전통적인 성별분업관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여성의 노동조건을 개선시켜왔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계보조자’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했고 노조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지도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여성노동력은 결혼하면 집으로 돌아갈 임시 혹은 단순보조 노동력으로 간주하면서 여성을 노동자라기보다는 장래의 모성, 주부, 그리고 어머니 등으로 규정짓고 여성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다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현모양처, 가정 속 존재로서의 주부,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 2세 국

민 출산 및 양육 책임자로서 교육받았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생애노동의식을 갖기 어려웠다²⁰⁾.

이러한 부녀지도계몽 활동의 기조는 당시 한국노총 조직들과 소속 남녀 조합원들의 가부장적인 성별규범 의식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에 남성 간부들이나 남성 조합원들은 남성의 임금을 더 많게 하는 성차별적인 교섭을 지속해왔다. 섬유노조에서는 “가족 수가 많은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좀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생계비 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다소 이해는 간다”(섬유노조, 1975:131)는 입장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을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임금교섭에 대한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드러내지 않았다. 여성노동자들이 ‘특별보호대상’임을 계속 상기시키는 활동 속에서 남성노동자들과의 동등한 임금이나 대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수십 년간 한국노총과 산별조직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켜온 조직적 차원에서의 여성노동자 권익향상 활동은 여성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남성과 평등한 노동조건을 확보하려는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예컨대 1970년대에 노조가 전개한 성차별적 임금정책이나 전략은 남녀분리 및 차별 임금의 요구와 타결, 각종 수당의 차별, 남성 중심의 임금과 인사관리제도의 개선, 기존 성별 임금격차의 유지 경향 등이었다²¹⁾. 그러나 당시 이들 임금차별 정책이나 기조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저항은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물론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여성사업장 대다수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한국노총 조직에서 1960년대부터 있었던 모성보호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활동은 여성노동자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1970년대에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일정하게 성과를 획득했다²²⁾. 당시 노동조합 여성활동의 중심이 모성보호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활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활동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필요성 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사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여성 특별보호조항이 있었고, 노동조합은 이를 근거로 1960년대 초부터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고 지속적으로 공론화

20) 성별분업담론, 유교적 가부장제 관념이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자의식이나 생애노동의식을 저해, 방해했다는 연구들(강남식, 2004:316-317; 김현미, 2000; 장미경, 2004)이 있다. 한국노총이 1977년 제조업 여성노동자를 조사한 결과도 이를 보여준다. 조사대상 여성노동자 18,675명(조합원 17,710명, 비조합원 965명) 중 미혼 여성노동자가 95.1%였다. 결혼 후 계속취업 의사 여부에 82.2%가 그만둘 생각이라 답했다(한국노총, 1978R:281, 282, 288).

21) 관련 내용은 박현미(2019:157-204) 참조.

22) 관련 내용은 박현미(2019:205-232) 참조.

시켜왔다. 한국노총 부녀부가 산별노조와 함께 1965년부터 매년 한 달 내외로 진행한 '부녀 및 연소노동자 보호 강조기간'의 행사들은 산업현장에서 여성 특별보호조항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전 조직 차원에서 여성의제를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산별노조에 따라 노동조합 내 여성 구성원이 40% 내외였고 섬유노조의 여성조합원은 80%가 넘었다²³⁾.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모성보호조항을 확보하고 지키게 하려는 지도계몽 활동이 이어져왔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도 향상시켰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생리적인 필요성, 저임금 보충 등의 현실적인 이유도 모성보호조치의 개선에 힘이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모성보호를 강조하고 관련조치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체위향상, 모자보건, 그리고 2세 국민교육 등을 명분으로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노총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은 여성조합원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국노총이 UNFPA에서 지원받아 수행했던 가족계획사업은 여성부서가 담당하였는데 이때 여성부서가 적극 결합하였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한국노총 여성간부 B는 제목은 성교육이라 써놓고 실제 여성의식이나 여성문제를 교육했다고 전한다. 예산이 없었던 여성부서에서 이 사업을 기회로 여성들을 노동조합의 교육이나 각종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여성운동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컨대 여성간부 B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전피임 교육을 해야 된다, 모성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등의 교육은 임신과 관련된 여성들의 의식도 향상시켰다²⁴⁾고 평가했다. 성교육이란 말도 없었던 당시, 혼전 성교육, 성폭력 등을 교육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말한 여성간부 B는 가족계획사업 교육이 "성이나 임신이나 하는 문제를 굉장히 터부시하던 시절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는 확실하"다고 전하였다(여성간부 B 구술, 2017. 11.13.).

가족계획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발간사업도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자 의식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 교육이 미혼 여성의 순결교육이나 혼전지도 등의 성교육으로 많이 진행되었지만 한국노총 가족계획판에는 성교육 외에 여성노동자 권리를 일깨우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었다. 한국노총 가족계획사업이 미혼여성을 중점 대상으로 삼았던 만큼 신문은 여자·연소근로자 법적 보호 조항이나 여성근로자 권리 등을 연재하였고 여성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생리휴가와 임금, 생리휴가권

23) 관련 내용은 박현미(2019:10)의 <표1-3> 참조.

24) "상당히 의식이 개발된 건 사실이야. 얘기는, 내 배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웃음) 넣을 수 있다." (여성간부 B 구술, 2017. 11.13.).

확보, 그리고 산전산후휴가 확보, 모성보호 확대 등 여성보호 조항 외에도 할증임금,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차별 임금시정을 위한 권리, 고용보장 등의 내용을 시리즈로 게재하였다. 여성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알 수 있는 내용들도 함께 실렸다. 이외 노동일기라는 조합원 참여란을 통해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경험을 알려주거나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1970년대 한국노총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의 정체성에 미친 이러한 상반된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1970년대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사업장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의 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조조직물이나 노동조합 내 여성조합원 비율이 유례없이 높았던 1970년대 심각했던 성별임금 격차는 전혀 해소하지 못한 반면에 모성보호제도들은 상대적으로 진전을 시켜낸 현실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75년부터 1981년까지 노동조합에서 시행한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이 이중적임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노동조합에서 결혼적령기 여성노동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들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전통적인 성별분업관과 유교적인 성별규범을 내면화시키는 한편 그들의 생애노동의식의 형성도 저해시켜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유례없이 노조에 많이 있었지만 공공연한 성차별적 임금교섭이나 정책, 성별 임금격차를 문제시하며 개선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계보조자, 장래의 모성, 주부, 그리고 어머니 등으로 규정받았던 여성노동자들, 결혼하면 가정으로 돌아갈 여성노동자들이 남성노동자와의 동등한 임금이나 대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당시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여성노동자 권익활동은 여성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남성과 평등한 노동조건을 확보하려는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족계획사업은 순결이데올로기나 가족, 자녀양육, 건강한 모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사회를 지배하였던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을 강화시켰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교육이나 계몽활동 등 각종 노동조합 활동에 여성노동자들을 참여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노동조합이나 타사업장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계획사업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노동자들의 의식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모성, 자녀양육, 가족 등을 강조하는 가족계획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음에도 사문화되어 있었던 모성보호 조치에 대한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와 주장에 힘을 보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즉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197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들의 보수적인 여성정체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당시 심각했던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노동조합에서 의제로 대두되거나 완화될 수 없었던 반면에 모성보호조치를 개선시켜 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이 남녀노동자에게 준 영향이나 그 사업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전통적인 성별분업관념을 심화시켰던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해 당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미혼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들의 성별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 하는 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성교육이나 가족계획신문발간 사업 등에 한정되었다. 향후 가족계획사업이 당시 미혼은 물론 기혼 남녀노동자나 노동 현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족계획사업과 같은 성별화된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은 여성노동자 의식은 물론 남성노동자 의식의 성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족계획사업은 당시 경제개발 및 인구문제와 관련해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목적 아래 한국노총이 정규사업으로 편성했고 한국노총 여성부서를 넘어 전 조직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한국노총이 조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을 여성부서와 산별노조 여성간부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혹은 참여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여성만이 동원 혹은 참여한 사업도, 여성사업도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기혼여성노동자들은 물론 남성노동자들의 의식이나 태도 등에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추가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나 여성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권은 과거 가족계획사업을 관통했던 뿌리깊은 성별분업담론과도 연결지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본 논문이 노동조합 가족계획사업만이 여성노동자들의 성별규범 내면화나 유교적인 성역할관념 습득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여성노동자의 생애노동의식 형성에 부정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970년대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은 당시 노동조합에서 다양하

게 진행된 성별화된 지도계몽활동의 하나였다. 또한 본 논문이 당시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들을 전통적 성별규범에 입각한 가족계획사업 등 한국노총 활동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동조했던 존재로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참고문헌

〈 노동조합 자료 〉

금속노조(1978). 사업보고.

섬유노조(1975). 사업보고.

원풍모방노동조합(1982). 사업보고.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1973). 사업보고서.

한국노총 각 년도 사업보고.

한국노총(1972). 인구정책과 가족계획.

_____(1975). 노총 가족계획사업 요원 훈련교재.

_____(1977). 노총근로가족복지사업보고서(1975.1.-1977.4.).

_____(1979).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독자여론조사보고서(1979.6.).

한국노총 가족계획판(1978.12.30.). “미혼근로여성 위한 성교육.” 2면.

_____(1979.2.28.). “시청각 교육이 효과적-금속노조 가족계획에 박차”. 3면.

_____(1979.4.30.). “가족생활과 모자보건”. 3면

_____(1979.5.30.). “바로 알아야 할 성”. 3면.

_____(1979.6.30.).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 3면.

_____(1979.9.30.). “미혼여성이 택할 길”. 3면.

_____(1979.11.30.). “좌담회: 산업장 성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4면.

_____(1978.12.30.). “노총의 가족계획사업”. 2면.

_____(1980.5.30.). “행복을 창조하는 슬기를 갖자”. 3면.

_____(1980.7.30.). “탈정신적 식물인간”. 3면.

_____(1980.10.30.). “뜻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3면

_____(1981.3.30.). “+-가족계획의 참뜻”. 3면.

〈 참고 논문 〉

강남식(2004).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노동운동”. 산업노동연구. 제 10권 제2호. 315-352.

김명숙(2004). “국가동원체제와 ‘가족계획’의 일상화”. 국가동원체제와 일상생활의 변화: 박정희 시대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김선옥·김명숙(1994). “할당제의 여성정책적 의미와 도입방안”. 여성연구. 제44호.

김은실(1991). “발전논리와 여성의 출산력”. 새로 쓰는 성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제8호.

- ____(1999).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 제8권. 79-100.
- 김현미(2000).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권 제1호. 37-64.
- 김홍주(2002). “한국 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5권 제1호. 51-82.
- 노동청(1975). 사업장을 통한 근로가족복지사업 상반기 사업진도보고서.
- ____(1977). 산업장 가족계획사업 최종평가조사 보고서.
- 대한가족계획협회(1980). 산업장 가족계획사업 조사연구.
- 맹광호(1972). “산업장 가족계획: 인도산업장 가족계획전지 세미나를 다녀와서”. 한국의 산업의학. 제11권 제4호. 카톨릭 대학 산업의학 센타 산업의학연구소.
- ____(1975). “산업근로자의 가족계획 실태”. 한국의 산업의학. 제14권 제1호. 26-29.
- ____(1977). “산업장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산업보건 관리요원들의 태도 조사”. 한국의 산업의학. 제16권 제4호. 133-144.
- 맹광호·이달영·김순태(1973). “산업장근로자의 가족계획에 관한 태도조사”. 한국의 산업의학. 제12권 제4호. 1-16.
- 박래영(1972). “한국의 과잉노동력에 관한 연구”. 흥대논총. 제4권. 197-221.
- 박현미(2019). 발전국가시대의 성별화된 노동조합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 연구 -1960~70년대 한국노총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2020). “노동조합과 성별 임금격차: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제17집 제1호. 25-57.
- 배은경(2004).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보건사회부(1987). 부녀행정 40년사.
- 신현옥(2000). 국가개발정책과 농촌지역 여성조직에 관한 연구: 1960-70년대 마을부녀조직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경순(2017). “젠더관계에서 본 1970년대 민주노조의 유형별 특성”. 기억과 전망. 제36권. 95-151.
- 이명선(1990).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시각: 가족계획에 대하여”. 여성학논집. 제7권. 113-136.
- 이미경(1989). 국가의 출산정책-가족계획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6권. 49-78.

- 이상현(1982). “산업장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부산상공. 제9권 제2호. 부산상공회의소.
- 이양재(1972). 한국 노동조합 간부들의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 및 태도조사 보고서. 인구문제논집. 제15권. 57-73.
- 장경식(1972).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인구정책과 가족계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장미경(2004). “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여성노동자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61권. 비판사회학회. 106-134.
- 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논집. 제7권. 11-22.
- 한국노동연구원(1990). 1990년도 임금관련 통계자료집.
- _____(2020). 2020 KLI 노동통계.
- 홍승직(1980). “가족계획과 사회개발: 가족계획사업의 단계적 추진”. 한국사회개발연구. 제3권. 1-81.
- 황정미(2001).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1960-70년대의 한국 부녀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ILO/ECAFE(1972). *Basic Document of ILO/ECAFE Regional Symposium on Labour and Population Policies*(Kuala Lumpur, 24 July - 3 August 1972).
- ILO(1972). *Report of Asian Study tour of Family Planning Services in Industry*(India, 20 November-8 December 1972).
- United Nations(1992.12), E/CN.6/1992/7, No.38.

Abstract

The Effect of the Family Planning Project at Workplaces in the 1970s on the Consciousness of Female Workers

Hyunmi Park*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family planning project at the workplace conducted by the labor union in the 1970s on the consciousness of female workers. Through this, we tried to understand the reality that, while the gender wage gap, which was severe in the 1970s, was not resolved at all,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was relatively improved.

In this regard,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and response of female workers to the issue of gender pay discrimination and maternity protection in the 1960s and 1970s.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approaches to the two issues in tha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female workers have been working to improve labor conditions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gender nor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family planning project at the workplace of the labor union, which was characterized as a gendered guidance and enlightenment activity in the 1970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labor union's family planning project has strengthened the conservative female identity of female worker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 the union'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related to family planning served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women's rights such as maternity protection.

Through this, this thesis was able to understand the reality that women in the 1970s did not properly raise the issue of discriminatory wages in the union at the time despite the high unionization rate.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labor union had improved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under the pretext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econd-generation national fertility and caregivers.

The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research, and the core data are the business report of the Federation of Trade Unions, the newspaper for family planning, and the publications of family planning projects by the labor union and the Labor Administration.

Keywords : Labor union, workplace family planning project, gender wage gap, maternity protection, female workers, traditional gender role norms

* Senior Research Fellow, FKTU RESEATCH CENTER.